

천안함 폭침관련 남북한 주요 신문사설¹⁾

논조 비교분석*

— 국내 보수, 진보성향 신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

김관호**

I. 서론

II. 시기 / 이슈별 남북한 사설논조의 특성

III. 사설논조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IV. 결론

요약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며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론분열의 양상은 보수,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국내 주요일간지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사설논조에서 극명하게 확인 되었다.

천안함 폭침의 전반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사설은 천안함 사건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문사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도발의 주체와 대응태세에 대한 일치된 국론결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일간지 사설과 북한 『로동신문』의 논설을 비교분석하여, 사설논조에 따라 형성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천안함 폭침이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북한소행이라는 주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군에 대한 대응조치와 안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 하겠다는 점도 유사 하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성토하였고, 정부 및 군의 사태 해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둘째, 북한의 『로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이후 자신들의 도발을 부정하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외에서 천안함 의혹으로 제기되던 견해들을 종합하여 <국방위원회의 결렬단 진상공개장>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반박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또 다시 <국방위원회의 결렬단 진상공개장>이라는 형태의 문건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도발을 부정하였다.

셋째, 천안함 폭침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열기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국내 주요일간지와 북한 『로동신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제재회부’ 등 단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조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주요 신문 사설논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신문사설 사설논조와 이념에 따라 보도경향과 담론 구조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천안함 사건보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1기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이후 민간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2기는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이전까지, 3기는 연평도 포격도발 시 부터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인 2011년 3월까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로 천안함 사건이 우리 주요 일간지 사설과 북한 『로동신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비교분석 하고 그 변화요인을 검토하여,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핵심어: 사설논조, 국론결집,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이 논문은 2013년 국방대학교 안보학술 진흥사업비와 2014 학년도에 청주대학교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대학교 교수.

1) 남북한 신문구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남한신문의 경우 사설에 한정하고, 북한은 『로동신문』에 게재된 모든 형태의 보도문을 다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I. 서론

1. 연구 목적

2013년 천안함 폭침사건 발발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해군은 3월 26일을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지정 하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2012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²⁾ 발발 2주년을 전후로 하여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 호 준위 2주기 추모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유가족,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2주기를 맞이하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천안함 희생자 추모 ‘서울 평화음악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도발 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응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그 시작부터 충격적 이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국내에서의 여론분열 양상도 과열 되었다. 그 과정에 ‘남남갈등’을 보여주는 언론사간의 서로 다른 시각의 사설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내여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북한 간 날선 비난성명이 오갔다. 소위 ‘천안함 이슈’는 남남갈등의 양상으로 까지 치달으면서 2010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규명 해보겠다는 각 종 단행본도 쏟아져 나왔다.³⁾ 이와 같이 ‘천안함의 이슈’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차이를 극명히 확인 시켜준 사건이었다. 당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간극이 발생한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천안함 관련 이슈’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혼란상을 보여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발표된 국내 주요일간지의 사설논조와 북한 『로동신문』 보도내용을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국내언론

2)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폭침’, ‘천안함 피침’ 등으로,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는 ‘천안함 침몰’로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폭침’으로 표기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3) 이주천,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김정일의 최후』 (서울: 뉴라이트 출판사, 2012); 이정훈, 『천안함 정치학』 (서울: 글마당, 2012); 이승현,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파주: 창비, 2010); 강태호, 『천안함을 묻는다』 (파주: 창비, 2010); 김보근외,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서울: 한겨레출판, 2010); 윤종성, 『천안함 사건의 진실』 (서울: 올리브M&B, 2011); 김창수의, 『천안함 외교의 침몰』 (서울: 풀빛, 2011); 김종하·김재엽, 『천안함 이후의 한국국방』 (성남: 북코리아, 2010);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신상철,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서울: 책으로보는세상, 2012); 평화재단 엮음, 『천안함에서 NLL까지』 (서울: 정토출판, 2013).

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로동신문』의 보도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언론 가운데 보수, 진보성향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구분에 따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이후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천안함 사건의 본질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소행론’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그와 같은 사태를 유발하게 한 정부와 군의 위기관리 능력을 비난하였던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논조를 분석하였다.

반면, 북한은 3월 26일 사건발생 이후 우리 측 반응에 맞춰 반박기사를 내보냈다.⁴⁾ 보도 형태는 비중에 따라 국방위원회 김열단 진상공개장,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외무성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외무성 대변인 대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사령부 통고,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군중대회 보고문, 해외 유명친북단체 반향문, 외신 인용문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북한은 이런 형태의 기사를 1년 동안 총 200여건을 게재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사건보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기는 천안함 폭침 사건발생 이후 민·군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2기는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이전까지, 3기는 연평도 포격도발 시 부터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인 2011년 3월까지로 나누었다. 각 시기별로 천안함 사건이 우리 주요 일간지와 북한 『로동신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보수, 진보 성향의 신문사설 논조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직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이념적 분열은 북한 언론 특히 『로동신문』의 대남 전략전술의 목표가 되어 더욱더 남남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고찰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천안함 사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천안함 폭침사건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천안함 사건이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이었고, 천안함 사건관련 주요 신문 사설논조 분석이나 북한의 『로동신문』 논조 분석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천안함 폭침관련 국내언론의 프레임을 비교분석한 논문으로 임양준(2013)⁵⁾은 ‘한

4) 이 논문에서는 조선노동당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인 『로동신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분석' 제하의 논문에서, 정부와 군이 사고관련 정보를 독점·통제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천안함 사태 관련보도를 자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 이념적 입장에 따라 사실과 칼럼을 통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완기(2012)⁶⁾는 '천안함 사건보도의 프레임 전략과 뉴스 객관성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에서, 보수성향의 『조선일보』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소행으로 규정하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 유포 및 처벌' 프레임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한겨레』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 '북한소행'보다는 '사고 및 함체결함' 또는 '원인진단 불가'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불신하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금아(2010)⁷⁾도 '남북 관련 사안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천안함 보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에서, 보수 매체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체로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강한 보도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천안함 사건관련 논문이 국내 보수, 진보성향 언론의 논조를 비교분석하면서 상반되는 논조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조의 차이는 본 논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수, 진보성향 신문의 사실논조를 비교분석함은 물론 추가로 북한의 『로동신문』의 논조도 분석하여 천안함 폭침관련 사실논조의 함의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에서 천안함 사건을 조명하였고, 연구방법 면에 있어서도 보수, 진보성향 주요일간지 간의 비교분석 및 북한의 『로동신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임양준,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2집, 1호 (2013), pp. 251-285.

6) 이완기, "천안함 사건보도의 프레임 전략과 뉴스 객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7) 이금아, "남북 관련 사안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천안함 보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Ⅱ. 시기 / 이슈별 남북한 사설논조의 특성

1. 시기별 보도경향 및 이슈별 담론 구조

본 연구에서는 국내주요 일간지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사설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기사를 비교분석 하였다. 구체적인 검토기간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발발 이후 2011년 3월 26일까지의 1년간 이다.

사건발생 이후 국내 주요언론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실이 대서특필 되면서 기사와 논평이 쏟아져 나왔지만, 북한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2010년 4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로동신문』 군사론평원 필명으로 “괴뢰들이 돌리고 있는 <북 관련설>의 진상을 밝힌다”⁸⁾를 게재하였다.⁹⁾ 이후 북한 『로동신문』의 천안함 관련 기사는 우리정부의 조사내용 발표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을 틀로 한 일정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정부가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를 발표 하자,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의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5월 25일 조국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관련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오히려 강성발언을 내놓았다. 이후 북한의 보도내용은 이와 같은 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에 유리한 국내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천안함 이슈’의 남북한 보도는 사건발생 이후 1년 동안에 집중되었고,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패턴 역시 이 시기의 보도행태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 1>은 국내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천안함 관련 사설의 총 건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일간지가 최초 천안함 폭침사건을 인식하였던 입장과 시기에 따른 변화추이, 아울러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천안함 폭침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8) 『로동신문』 2010년 4월 18일 “괴뢰들이 돌리고 있는 <북 관련설>의 진상을 밝힌다”

9) 대다수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와 같은 보도 태도, 즉 사건발생이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소행론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크게 반발하며 즉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20 여일 후에 보인 북한의 반응은 충분히 우리와 주변국들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려는 계산된 측면이 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1〉 국내 일간지 및 노동신문 천안함 관련사설 건수(가나다순)¹⁰⁾

구 분	1기 (‘10. 3.26~5.20)	2기 (‘10. 5.21~11.23)	3기 (‘10.11.24~‘11.3.26)	총 건수
경향신문	37 (27%)	88 (55.5%)	26 (17.5%)	151 (100%)
동아일보	56 (23.8%)	118 (48%)	64 (28.2%)	238 (100%)
조선일보	54 (30.2%)	63 (44.9%)	32 (24.9%)	149 (100%)
한겨레	37 (30.6%)	65 (54.5%)	21 (14.9%)	123 (100%)
노동신문	2 (1.6%)	95 (80.5%)	21 (17.8%)	118 (100%)
총 건수	186 (27.4%)	429 (49.7%)	164 (22.9%)	779 (100%)

천안함 폭침관련 사설은 『동아일보』가 총 238건으로 가장 활발한 논평을 게재하였고 그 다음이 『경향신문』151건, 『조선일보』149건, 『한겨레』123건 이었다.

본 연구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설을 사건발생 시점부터 1년으로 잡은 이유는 1주년을 기점으로 관련 사설이나 기사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 수도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천안함 폭침사건 1주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지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¹¹⁾

한편,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담론의 구조는 크게 원인론-대응론-기타 국내외 문제의 구도로 진행 되었는데 사건초기에는 주로 원인론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민·군 합동 조사결과 발표이후 점차 대응론 쪽의 논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기타 내용의 경우는 원인론에서 대응론 쪽으로 사설논조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국내외 정치·경제 이슈에 따라 연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설의 경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매우 활발

10) 이 논문에서 ‘천안함 관련’ 사설은 넓은 의미에서 적용하였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내외 주요이슈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언급이 있는 모든 사설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천안함 폭침관련 사설은 ‘원인론’과 ‘대응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사설들은 ‘기타’로 표기하였다.

11)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언론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게 된 것은 일반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게 사실을 게재하였다.

부연하자면 원인론은 천안함 사건발생 초기에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논지의 사설이 게재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원인조사를 확실히 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는 논조의 양상을 보였고,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4개 언론사의 논지는 확연하게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쪽과 정부와 군의 미흡한 대응조치에 대한 비난조의 사설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응론 적 차원에서도 남북한 간의 대화나 6자회담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과 국내의 부실한 안보태세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명확히 갈리기 시작하였다.

천안함 폭침관련 사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발표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이전인 2기 전체를 보면 언론사별 사설의 내용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또한, 2기부터 각 신문사별로 천안함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도 특기 할만한 점이다. 4개 언론사 모두 2기에 49.7%의 사설 게재 율을 보여, 전체 시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설이 이시기에 게재되었다. 이는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내리면서, 상대적으로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결론에 대한 문제제기에 사설을 할애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의 도발로 확정하고 정부와 군의 사태 해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로동신문』의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로동신문』은 총 118건의 천안함 관련 기사를 게재 하였는데 이 가운데 95건의 기사가 2기에 게재 되었다.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이후 천안함 보도 2기에 각 언론사들의 사건 정황에 대한 엇갈린 사설을 게재하면서 논쟁이 격화 되었다면, 천안함 보도 3기가 시작되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천안함 보도 3기에는 명확한 북한의 도발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천안함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여론이 명확하게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언론사들의 천안함 관련 이슈는 수면 아래로 수그러들었고 연평도 포격도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으며,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었다.

2. 남북한 주요 사설논조 분석

가. 천안함 폭침 사건직후 사설논조

(1) 남한 주요 일간지 사설의 논조 변화 : 주제별 내용, 횟수

(가) 경향신문 (1기)

『경향신문』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37건의 사설을 게재 하였다. 『경향신문』은 2010년 3월 29일 사설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과의 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하며, 정부와 군 당국의 초기대응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¹²⁾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주로 “위기에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침착하게 참사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 역시 사회적 성숙성의 지표”¹³⁾이다.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인내심과 냉정이 필수적이다”¹⁴⁾라는 등 천안함 폭침사건의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북한 개입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군 고위 당국자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심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전제해서도 안 된다. 투명한 조사, 과학적 판단이 우선이다. 만에 하나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실체 없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만 남겨 놓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우리 모두 조사 과정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¹⁵⁾

이 당시 『경향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조는 정부차원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판적 어조가 강했다. 민·군 합동조사 결과발표 직후에는 “천안함 침몰이란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마저 치졸한 색깔론 적 시각으로 접근”¹⁶⁾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12) “[사설] 이 위기를 믿음직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경향신문』, 2010. 3. 29.

13) “[사설] 천안함 참사,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0. 3. 30.

14) “[사설] 천안함 진상조사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경향신문』, 2010. 4. 5.

15) “[사설] 함미 조사, 예단 피하고 냉정하게 지켜보자,” 『경향신문』, 2010. 4. 16.

16) “[사설] 천안함 사건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들,” 『경향신문』, 2010. 5. 21.

민·군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초기에도 군 당국의 미덥지 못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문제는 체계적인 구조 활동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¹⁷⁾이라 던지 “천안함 사고는 군 지휘부의 무능력과 시스템 부재를 드러냈다.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안보 불안마저 제기되고 있다”¹⁸⁾ 등 군 당국의 무능함을 중점적으로 꼬집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첫째, 정부는 민감해진 시민들의 감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며 원인규명은 다음 순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¹⁹⁾면서 “정부는 북한소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된다 해도 군사적 보복은 물론 다른 실효성 있는 보복 조치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자위권이니 응징이니 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²⁰⁾ 고 정부당국의 태도 역시 비난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관련이 없다면 인도적 측면에서 최소한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²¹⁾면서 일방적인 대남비난을 일삼던 북한에 일침을 가하는 논조를 보였고 북한의 태도에 자제를 촉구하는 사설을 합동조사 결과발표 5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게재 하였다.²²⁾

(나) 동아일보 (1기)

『동아일보』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직전까지 56건의 사설을 게재 하였다. 『동아일보』는 2010년 3월 29일 사설에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북한 어뢰공격이나 남북한이 깔아놓은 기뢰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함내 탄약고와 유류고의 폭발, 암초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의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이동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응

17) “[사설] 여전히 미덥지 않은 군의 구조활동,” 『경향신문』, 2010. 4. 1.

18) “[사설] 오락가락하는 이 대통령 발언 진의 뭔가,” 『경향신문』, 2010. 4. 9.

19) “[사설]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른다,” 『경향신문』, 2010. 4. 2.

20) “[사설] 이런 정권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나,” 『경향신문』, 2010. 5. 3.

21) “[사설] 한반도 평화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 해야,” 『경향신문』, 2010. 5. 4.

22) “[사설] 북한은 대남 위협 중단하고 ‘달조’ 근거 내놔야,” 『경향신문』, 2010. 5. 25.

장”을 주문하였다.²³⁾

『동아일보』는 1기에 총 56건의 사설을 게재하며 가장 활발한 관심을 보였다. 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보적 태도가 12건, 북한 가능성에 대한 사설이 5건, 대응론 적 차원에서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한 것이 33건이다. 반면, 기타 국내외 이슈와 연결시킨 경우는 6건에 머물렀다.

이 시기에 『동아일보』사설의 특징은 민·군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는 점이다. 또한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측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비판과 중국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난한 점이다. 전반적으로 북한도발 가능성을 점치면서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하는 논지의 사설들이 게재 되었다.

(다) 조선일보 (1기)

『조선일보』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부터 5월 20일인 민·군 합동조사결과발표 직전까지 54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원인론의 측면에서 유보적 태도는 9건, 정부 및 군 대응에 대한 비판이 10건, 북한에 대한 비판이 4건이다. 또한 대응론 적 측면에서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한 사설을 17건 게재하였고 기타 14건이다.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동아일보』 사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및 군의 대응에 대한 비판조의 사설이 많았고 기타 국내외 문제와 관련하여 진보진영의 북한 감싸기 등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사설의 양이 많았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 발발 3일후인 29일에 사설을 게재하였다.²⁴⁾ 최소사설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 『동아일보』와 유사하게 군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반잠수정에 의한 도발’설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사설의 특징은 다른 3개 신문과 마찬가지로 민·군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까지는 최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동아일보』와 유사하게 대비태세 강화조치를 주문하면서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야당에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주문과 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사태 재발방지와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 하였다.

23) “[사설] 천안함 ‘장병구조, 원인규명, 후속대응’ 만전을,” 『동아일보』, 2010. 3. 29.

24) “[사설] 실종자 구출과 진상 규명에 총력 집중하라,” 『조선일보』, 2010. 3. 29.

(라) 한겨레 (1기)

『한겨레』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부터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37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한겨레』는 2010년 3월 29일자 사설에서 “이제까지 정황으로 볼 때 일단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은 아닌 듯”하며 “정부와 군이 혹시라도 안보 또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진상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²⁵⁾며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같은 날의 사설에서 “지휘와 응급 대응체계가 잘 갖춰졌다면 이번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²⁶⁾이라며 정부와 군에 대한 책임을 추궁 하였다. 정부와 군에 대한 비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자 사설에서 “군은 이미 이번사건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허점”²⁷⁾을 드러냈고, “우리 해군은 지금 ‘무비유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난하였다.

이 같은 논조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군과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²⁸⁾ “이번 참사를 통해 군은 장비보다는 보고와 지휘체계, 기강 차원에서 문제를 드러냈다”²⁹⁾ “정부와 군은 정보를 통제·왜곡하려는 태도 자체가 불신의 원천임을 직시”³⁰⁾하여야 한다는 등 우리 군의 대응자세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한겨레』는 “군이 고의적 은폐나 거짓말을 일삼아온 게 확인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³¹⁾며 천안함 사건의 1차적 원인을 우리군의 대응태세에서 찾은 반면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공격 설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³²⁾ 제하의 사설에서는 “일부 보수 정치세력과 황색언론들이 끈질기게 북한소행 설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북한 공격 설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주문하였다.

25) “[사설] 천안함 참사, 철저한 구조 노력과 원인 규명을,” 『한겨레』, 2010. 3. 29.

26) “[사설] 미숙한 대처가 참사 키운 것 아닌가,” 『한겨레』, 2010. 3. 29.

27) “[사설] 군의 총체적 역량 한계 드러낸 천안함 참사,” 『한겨레』, 2010. 3. 30.

28) “[사설] 이 통한의 죽음,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겨레』, 2010. 4. 16.

29) “[사설] 성급하고 위험한 대통령의 ‘천안함 처방,’” 『한겨레』, 2010. 5. 5.

30) “[사설]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왜곡,” 『한겨레』, 2010. 3. 31.

31) “[사설]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 『한겨레』, 2010. 4.2.

32) “[사설] 무책임한 ‘북한 공격 설’유포, 저의가 무엇인가,” 『한겨레』, 2010. 4. 3.

이 시기에 『한겨레』의 사설내용을 보면 우선 원인론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사설 11건을 게재하였고 정부와 군에 대한 비난은 17건, 북한 도발론은 아예 없었다. 대응론 적 사설에서도 이미 남북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사설을 2건 게재 하였고, 기타 7건이었다.

(2) 북한의 주요 보도내용 (1기)

천안함 폭침이후 국내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대응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 되었으나 정작 북한에서는 사건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4월 18일 이전까지 북한의 보도행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군사론평원>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동 보도에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는 부분과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꾸민 날조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던 국제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논조를 보였다.

〈표 2〉 로동신문 1기 보도내용

군사론평원 ³³⁾	- 유감스러운 불상사 - 괴뢰당국이...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포 - 무능한 국정운영... 벗어나기 위한 - 국제적인 대북제재 분위기 지속하여...우리를 압박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고발장	-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며 여론을 우롱 - 지방자치제선거를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발마적 발악 - 한미관계우선론으로 북남관계는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철저히 전략함 -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일을 택하여 미국행각의 길에 오른 것도 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임.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도발 설’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사론평원>명목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내용상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내용 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불만은 한 달 뒤인 5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고발장>을 통해 보도 되었다. 동 보도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관련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도발이며 여론을 우롱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발마적인 발악”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33) 로동신문 2010년 4월 18일. 북한은 최초로 <군사론평원>이란 형식의 보도를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최초로 일으킨 국지전 도발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보도형태라 할 수 있다.

가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씌웠던 테로지원국 모자를 벗기려 할 때 앞장서 반대해 나선 것도 괴뢰패당이고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떠들면서 상전을 끼고 제재 소동을 가장 악질적으로 벌인 것도 괴뢰들”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일에 방미 길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이고 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사업문제를 연계시킨 발언을 “망발”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 외에도 당시 차세대 무기도입 사업 등 국방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였다.

1기에 보도된 2건의 북한보도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에 대한 것들이었다. 면밀히 보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켰다는 자기변명으로 해석된다.

나.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이후 사설 프레임

천안함 폭침관련 보도는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4개 신문사에서 천안함 폭침관련 사설은 총 334건으로 기간 중 전체의 49.8%에 해당한다. 그만큼 천안함 관련논의는 2기에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발표이후 각 신문사별 사설의 논조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론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북한의 보도내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 2, 3기 총 게재 논설건수 118건에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95건)되었다. 보도내용도 매우 다양해졌다. 단순히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명의로만 발표되지 않고 ‘국방위원회’, ‘전선서부사령부’, ‘조선중앙통신사’, 각종 기자회견, 해외 유명친북단체 반향문, 외신인용 보도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1) 남한 주요 일간지 사설의 논조 변화 : 주제별 내용, 횟수

(가) 경향신문 (2기)

『경향신문』은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부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직전까지 88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민·군 합동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북한이 잠수정으로 중어뢰를 기습 발사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³⁴⁾며 “이런 위협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북한에 벌을 줘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대북조치는 남북대화라는 출구전략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주문하였다.

이 시기에 게재되었던 『경향신문』의 사실은 대체적으로 정부와 군의 잘못된 대응 및 태도를 지적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사실도 많았다. 이러한 흐름은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직후에 바로 나타났는데 우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는커녕 불안을 조성했고, 임박한 위협에 대해 대처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를 대결의 장으로 바꿔 놓는 데 기여했다.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건가.”³⁵⁾ 라는 등 북한도발의 근본적인 책임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기인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안함 폭침사건 2기에 나타난 『경향신문』사실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민·군 합동조사발표 직후에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사실이 처음으로 1건만 게재 되었고 그 이후 정부와 군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사실이 16건, 대응론 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사실이 34건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기타 이슈와 관련된 사실이 가장 많은 36건을 차지하였는데 교육감선거 및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슈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계하여 북풍 논란이나 색깔논쟁으로 확대를 경계하는 논조의 사실이 대부분 이었다.

천안함 폭침 2기의 『경향신문』 사실은 주로 대응론 적 차원에서는 남북 대화를 주장하면서 국내외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천안함 논쟁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판하는 논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나) 동아일보 (2기)

『동아일보』는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발발 시 까지 총 118건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수적으로 4개 신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실을 게재하였다. 내용별 게재 수를 살펴보면 원인론 적 차원에서 정부 및 군의 잘못된 대응을 꼬집는 사실 4건을 게재하였고 대응론 적 차원에서는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사실을 76건 게재하였

34) “[사설] 실효성 있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0. 5. 21.

35) “[사설] 한반도 불안 방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향신문』, 2010. 5. 22.

다. 그 밖에 기타 사설은 37건을 실었다.

천안함 폭침관련 보도 2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일보』는 〈안보가 먼저냐, ‘선거 장사’가 먼저냐〉 제하의 사설을 통해 야권이 천안함 사태를 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비난했다. “야권은 선거에 몰두하느라 국가안보는 아예 잊어버린 듯하다. 천안함 사태를 저지른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억박지르는 듯한 행태마저 보인다.”³⁶⁾면서 6.2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천안함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카드를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동아일보』의 대북 성토관련 기사는 민·군 합동조사결과발표 이후 바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명칭도 ‘천안함 폭침’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³⁷⁾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천안함 폭침(爆沈)은 북한 김정일 집단이 『1번』 어뢰로 저지른 도발 이었다.”며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다. 이후 『동아일보』의 천안함 관련사설은 대북 비판과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주장하는 사설이 90%이상을 차지하였다. 기타 사설의 경우도 민·군 합동조사결과를 불신한 나머지 오히려 도발자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는 진보진영 및 야당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과 국제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다) 조선일보 (2기)

『조선일보』는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이후 연평도 포격도발 시까지 의외로 사설수가 적었다. 총 63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는데 『동아일보』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 보도의 특징은 원인론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이 8건이지만 우리 정부 및 군에 대한 비판관련 사설이 9건으로 의외로 균형 잡힌 사설 건수를 보여줬다. 하지만 대응론에 있어서 남북한 대화론은 3건에 그친 반면, 대비태세 강화론은 29건을 게재하였다. 그 밖에 기타 내용이 19건을 차지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민·군 합동조사결과발표 직후부터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북한정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³⁸⁾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군

36) “[사설] 안보가 먼저냐, ‘선거 장사’가 먼저냐,” 『동아일보』, 2010. 5. 20.

37) “[사설] 김정일 집단, 너희가 ‘우리 민족’이냐,” 『동아일보』, 2010. 5. 21.

38) “[사설] 北,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계속 발뺌할 것인가,” 『조선일보』, 2010. 5. 21; [사설] 준엄한 북한 응징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평화 수호해야,” 『조선일보』, 2010. 5. 22.

합동조사결과를 신뢰하고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타 사설에서는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진보진영의 태도를 비난했다.³⁹⁾ 전반적으로 천안함 보도 2기를 기점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유사한 논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라) 한겨레 (2기)

『한겨레』는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부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직전까지 65건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민·군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적 의견의 사설을 10건 게재하면서 정부발표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 및 군의 잘못에 대한 지적도 7건 게재하였다. 그리고 정부발표 직후에는 북한의 과격한 대응을 비난하는 사설도 1건 게재하였다.

대응론 적 차원에서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해법을 주장하였지만 대비태세 강화를 주장하는 사설은 한 건도 실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였지만 주장의 본질이 대비태세 강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사설은 제외하였다.

『한겨레』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다음날 사설에서 “북쪽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힘들게 됐다”⁴⁰⁾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북한 소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모든 관련국들의 뜻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에 못잡게 중요한 일이 한반도 정세가 불필요하게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⁴¹⁾이라고 강조하였다.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지적⁴²⁾은 계속되었다.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구심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여 남북 공동조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³⁾는 사설에서도 잘 드러났다. 또한 “최대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과학적

39) “[사설] 국제사회는 北 비난에 공동 보조, 그러나 한국 정치권은,” 『조선일보』, 2010. 5. 22.

40) “[사설] 한반도 위기 키우지 않을 냉정한 대응을,” 『한겨레』, 2010. 5. 21.

41) “[사설] 한반도 위기 키우지 않을 냉정한 대응을,” 『한겨레』, 2010. 5. 21.

42) “[사설] 무너진 안보, 이명박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한겨레』, 2010. 5. 21.

43) “[사설] ‘천안함 남북 공동조사’ 적극 검토해야,” 『한겨레』, 2010. 5. 24.

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 설명을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불신도 해소될 수 있다”⁴⁴⁾고 하였다.

『한겨레』는 “진정으로 천안함 사태를 풀고 싶다면 직접적인 대북 대응을 절제하고 철저한 보완조사에 나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비핵화 노력이 본 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일이다.”⁴⁵⁾ 라고 하여 대화를 통한 천안함 파국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 6자회담의 재개도 주장하였다. 특히 ‘국회 특위’의 적극적인 가동,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조사단도 꾸려볼 필요성⁴⁶⁾을 언급하면서 천안함 폭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한겨레』의 경우에도 민·군 합동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어뢰 추진체 안에서 발견된 조개에 대해서는 “어뢰 추진체가 천안함 공격에 쓰인 게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개 논란’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어뢰 추진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논란을 해소 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⁴⁷⁾면서 재조사 및 새로운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2) 북한의 주요 보도내용 (2기)

천안함 폭침관련 보도 2기에 북한의 보도도 매우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천안함 관련 기사를 총 72건을 게재하였다. 특히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전반적인 기사가 우리와 같은 팩트성 보도 보다는 논설에 가까운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의 기사에서 별도로 사실을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았다. 실례로 북한 『로동신문』에 실리는 ‘정론’이나 ‘논설’, ‘사설’ 명의로 발표되는 글들은 소논문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많은 분량의 논설문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신문의 사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천안함 관련보도의 경우에는 발언주체 및 기사의 성격에 따라 1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에서 분류해 놓았다. 북한의 천안함 관련 보도에서는 여러 형태의 보도문들이 눈에 띄었다. 군사론평원이나 국방위원회 진상공개장, 인민군 전선서부사령부 통고 등의 보도형태는 기존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이다. 북한체제가 천안함 도발을 일으키고 나서 그 뒷수습을 위해 매우 분주히 활동하였다는 반증이다.

44) “[사설] 틀어막는 논란 덮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 『한겨레』, 2010. 5. 26.

45) “[사설] 강화되는 동북아 대결구도, 최대 피해자가 될 건가,” 『한겨레』, 2010. 7. 26.

46) “[사설] 국회라도 ‘천안함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한겨레』, 2010. 5. 28; “[사설] 천안함 ‘4국 공동조사’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겨레』, 2010. 5. 29.

47) “[사설] 천안함 재검증 필요성 더하는 ‘어뢰 추진체 조개,’” 『한겨레』, 2010. 11. 6.

〈표 3〉 로동신문 2기 보도내용⁴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1
	검열단 진상공개장	1
	기자회견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
	서기국 보도	2
	담화	1
외무성	대변인 담화	2
	대변인 대답	2
군사론평원		1
인민군 전선서부사령부	통고	1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1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1
군중대회	보고문	2
유엔주재 북한대사	북한대사 신선호 편지	1
	상임대표 기자회견	1
외신인용 기사		8
외신기자회견		1
해외유령단체	반향문	10
일반기사		34
합계		72

보도기관별 횟수를 살펴보면, 도발사건의 주체인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과 검열단 진상 공개장, 기자회견을 각각 1회씩 보도하였다. 그리고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역시 대변인 성명 1회, 서기국 보도 2회, 담화 1회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유엔안보리 제재회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 외무성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우선 대변인 담화와 대변인 성명이 각각 2회씩 보도되었고 유엔주재 북한대사인 신선호의 편지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를 1회씩 내 보냈다.

그 밖에 군사론평원과 전선서부사령부에서의 통고 등 군부 내부의 목소리도 지면을 통해 전달되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평양시 군중대회 등 내부 인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보도가 발표되었으나 1회성에 그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군중대회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북한의 천안함 보도에서 특정기관 발표문 및 보도문을 제외한 일반기사가 34건으로 가

48) 『로동신문』 2010년 5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24일까지의 기사를 종합하여 분류했다.

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신보도를 인용한 기사도 8건으로 나타났고, 해외유명친북 단체에서 발표된 반향문 등도 10건 이었다. 북한의 일반기사들은 기관에서 발표한 담화나 보도문 등에 대한 재강조의 성격이 강했고 외신보도 인용기사의 경우에는 UN 대북제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해외유명친북단체는 영국, 인디아, 남미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전하며, 각종 친선단체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명된 유명단체들 명의로 발표된 글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즉,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급 기관의 보도문, 담화발표·일반기사·외신기사 인용보도·해외친북유명단체 성명 등의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당국의 발표문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다시금 지면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순환 논리’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다. 연평도 포격도발이후 사설논조 변화양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천안함 보도행태에서 또 하나의 변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가 천안함 도발의 주체와 대응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그러한 논쟁을 빠르게 잠재웠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증거나 조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우리사회에 가져다 준 충격은 훨씬 직접적인 것이었다. TV 속보를 통해 전해지던 포연에 휩싸인 연평도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북한의 불발탄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변호는 천안함 『1번』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남남갈등을 보여주던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며 더 이상의 도발도 가능하다는 오판이 가져다 준 결과라 할 수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하나로 결집시켜준 결과를 가져왔고, 진보진영에서도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

(1) 남한 주요 일간지 사설의 논조 변화 : 주제별 내용, 횟수

(가) 경향신문(3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인 3기의 가장 큰 특징은 천안함 관련 사설의 수가 급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경향신문』은 원인론에 대한 사설은 하나도 게재하지 않

았다. 대신 대응론 적 차원에서 남북한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13건 게재하였고,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건 게재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문제 삼으며 비난했다.⁴⁹⁾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도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라고 표현하였다. ‘군사적 충돌’은 쌍방이 교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희석시키고 남북공동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논리였다.

이 시기에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을 보면 유독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을 정부나 군의 실책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강화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차제에 우리정부와 군의 첩보나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안보’의 중요성과 그 것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증이 제시된 경우에만 ‘안보강화론’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에 『경향신문』이 보여준 사설의 논조는 한마디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론”이다. 이미 북한의 도발이 명백해진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사설들이 많이 게재되었다.⁵⁰⁾

(나) 동아일보(3기)

이 시기에 『동아일보』는 총 64건의 사설을 게재하였고 그 가운데 정부 및 군의 대응문제를 질책한 것이 2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한 사설이 1건 실렸다. 그리고 대응론 적 차원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사설이 4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타 사설은 13건이 게재 되었는데 주로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난⁵¹⁾하는 사설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내경제 동요를 경계하는 사설⁵²⁾을 게재하였다. 천

49) “[사설] 안보불안 해소할 근본 대책 있나,” 『경향신문』, 2010. 11. 25; “[사설] 안보도 지도력도 불안하다,” 『경향신문』, 2010. 11. 26; “[사설] ‘안보 무능’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세우라,” 『경향신문』, 2010. 11. 27; “[사설] 국정원장이 실토한 정부의 안보무능,” 『경향신문』, 2010. 12. 3.

50) “[사설] 북한 변화 바라다면 대북 접근법 바꿔야,” 『경향신문』, 2010. 12. 30; [사설] 불안 대신 평화, 통치 대신 정치를 원한다,” 『경향신문』, 2011. 1. 1; [사설] 조평통 남북회담 제의, 미흡하지만 수용하라,” 『경향신문』, 2011. 1. 10; [사설] 남북, 유연한 접근으로 군사회담 성과를,” 『경향신문』, 2011. 1. 22; [사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대화 재개해야,” 『경향신문』, 2011. 2. 11

51) “[사설] 中, 6자회담으로 北연평도 도발 물타기 할 땐가,” 『동아일보』, 2010. 11. 29; “[사설] 中-러의 편들기가

안함 3기에 게재한 『동아일보』의 사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합동 군사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군의 개혁을 주장⁵³⁾하면서 천안함 폭침을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국내 진보진영에 대해 성토하는 논조⁵⁴⁾를 보여 주었다. 또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켰던 북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2차례 정상회담까지 한 남북대화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대화자체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하여 대화보다는 대남도발에 대해 분명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⁵⁵⁾

(다) 조선일보(3기)

이 시기에 『조선일보』는 총 32건의 사설을 게재하였고 정부 및 군의 대응자세를 질책한 것이 2건, 나머지는 북한도발을 막기 위한 대응론 적 차원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사설이 23건 이었다.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에 <북한의 불법공격을 즉각·엄중·정확히 응징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공격해 왔다.”면서 “국민 역시 비상(非常)한 시기에는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및 군 당국도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동아일보』의 논조와 유사하게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6자회담 재개 등을 거론하면서 현 사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한 채 임시변통에만 매달려서는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는 없다”⁵⁶⁾면서 보다 근본적인 북한의 사과 및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천안함 관련 보도3기에 나타나는 『조선일보』사설의 논조는 앞서 살펴본 『동아일보』의 논조와 유사하였다. 다만, 관련사설의 게재 건수 에서만 약간 차이를 보였

北 더 날뛰게 한다,” 『동아일보』, 2010. 12. 20.

52) “[사설] ‘북한 리스크’ 치밀한 관리로 시장 동요 막아야,” 『동아일보』, 2010. 11. 30;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 『동아일보』, 2010. 12. 21.

53) “[사설] 3軍 밥그릇 싸움과 육군의 과욕,” 『동아일보』, 2011. 1. 7.

54) “[사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후진 진보,’” 『동아일보』, 2011. 1. 17.

55) “[사설] 천안함·연평도 사과-도발 중단 반드시 받아내야,” 『동아일보』, 2011. 1. 21.

56) “[사설] 中, 6자회담 제안 앞서 北 공격부터 짚어야,” 『조선일보』, 2010. 11. 29.

다. 국내적으로는 국론분열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당한 제재를 촉구하는 논조를 보여 주었다.

(라) 한겨레(3기)

『한겨레』는 3기 동안 21건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원인론에서도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1건, 정부 및 군의 대응을 질책하는 사실이 2건 게재되었다. 대응론 적 차원에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한 사실은 실리지 않았고 대화를 촉구한 사실만 6건 게재되었다. 『한겨레』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남북한 당국에 냉정함을 주문하였다. 『한겨레』는 “관련 당사자들이 힘과 고집만 내세운다면 자칫 추가 충돌마저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은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 기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⁵⁷⁾면서 냉정함을 찾고 남북한 간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⁵⁸⁾면서 대북제재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 가능한지 물었던 점에 대해서도 “한반도 군사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군사대응은 무책임하다”⁵⁹⁾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겨레』는 천안함 폭침 1년 뒤에 실린 사실에서 “지금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되레 한·미·일 對 북·중 냉전 구도가 되살아난 가운데 한국의 외교 입지만 위축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횡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⁶⁰⁾라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책임추궁 보다는 냉전구도가 구축되고 있는 현실과 국내에서 공안정국이 도래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천안함 3기에 『한겨레』에 게재된 사실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경향신문』과 유사 하다. 우선, 원인론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책임론 보다는 원인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57) “[사설] 사태 악화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움직임들,” 『한겨레』, 2010.11.26.

58) “[사설] ‘진정성’ 담보 위해서도 남북대화 본격화해야,” 『한겨레』, 2011. 1. 8.

59) “[사설] 사태 악화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움직임들,” 『한겨레』, 2011. 11. 26.

60) “[사설] 천안함 침몰 사건 1년을 되돌아보며,” 『한겨레』, 2011. 3. 25.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한 질책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으로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하기 보다는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2) 북한의 주요 보도내용(3기)

북한 『로동신문』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 천안함 폭침 1주년까지 20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북한은 2010년 11월 16일 <대결광증이 낳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나서 7일 만인 23일에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장병 2명이 희생 되었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진 포탄으로 가옥 등이 파괴 되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전쟁도박>⁶¹⁾이란 기사를 통해 연평도 도발이 우리 측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대응공격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후 북한은 한 동안 관련기사를 신지 않다가 김정일 생일날인 2.16을 기점으로 6편의 관련기사를 게재 하다가 2월 24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2>을 통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도했다. 이는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 오랜 침묵을 지키다 11월 3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1>과 같은 패턴이었다. 다만, 천안함 폭침은 10여 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도 되었던 반면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의 대응은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1>은 다음 13개항으로 이루어진 반박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① 스스로 북 어뢰가 아님을 인정한 알루미늄 합금 어뢰조각
- ② 강도적인 날조품 어뢰 추진체
- ③ 세계를 우롱한 어뢰 설계도
- ④ 무식의 결정체 1번 글씨
- ⑤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 물기둥 설
- ⑥ 소경의 주장 ㄷ 자형 침투경로
- ⑦ 과학적 부정을 당한 알루미늄 흡착물
- ⑧ 멀쩡한 좌현 스크루와 형광등
- ⑨ 발표된 증거는 좌초증거
- ⑩ 자취를 감춘 미공개 영상자료

61) 『로동신문』, 2010. 11. 30.

- ⑪ 몰상식한 부식기간 측정높음
- ⑫ 조소를 자아낸 침몰 모의실험
- ⑬ 불량 기소장으로 된 최종보고서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국내외에서 북한도발 무관 설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엮어놓은 듯 한 모양새다. 그만큼 북한이 천안함 도발이후 불리해진 국제정세 하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사항까지 동원해가며 변명하는 행태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2>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도발이 이루어지게 된 국내외적 정세를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 ① 연평도 포격전의 실상
- ② 연평도 포격행위는 뿌리 깊은 체제적 도발의 연장
- ③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추구한 역적패당의 범죄적 기도
- ④ 연평도 포격도발의 배후조종자
- ⑤ 연평도 포격전이 주는 심각한 교훈

북한은 연평도 도발이 “천안호 사건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천안호 날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제의 움직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구도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여 두 사건 모두 한미 양국의 모략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후 2011년 3월 17일에 발표된 <론평원>의 글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남조선 당국의 진정성 타령은 미국과의 침략적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천안함 3기에 보여준 북한의 보도행태의 특징은 우선 관련 기사의 수가 급감 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2기에서와 같이 해외 언론인용이나 해외 유명친북단체의 반향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은 지상에서 발생한 명백한 도발행위였기 때문에 해외나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더 이상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를 하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Ⅲ. 사설논조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천안함 폭침의 원인규명과 대응과정에서 국내 보수, 진보성향의 신문은 대조적인 논조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특히 보수, 진보성향의 신문으로 분열된 논조는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폭침’ 관련사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이라는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수, 진보성향의 신문이 원인규명과 대응조치에 분열된 논조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미치는 함의는 어떠한 것일까?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역사적 팩트는 하나이나, 이를 해석하고 재구성 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과 목표를 반영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팩트는 동일한데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열된 사설논조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 간극을 더욱더 공고히 하여 중국에는 국가안보 태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1. 국내 보수, 진보성향 신문 사설논조 비교분석

『동아일보』,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보수성향의 신문 1기 논조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신중한 모드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침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이 두동강 나고 급격히 침몰할 수 있는 경우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등의 전례로 보았을 때 북한소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한 이후에는 보수성향의 신문 2기 논조는 남북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보다 북한의 대남침투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에게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사과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논조는 6.15 및 10.4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그동안 수많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간 합의서를 도출하였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감을 준 적이 거의 없었기에 더 이상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었다.

한편, ‘천안함 폭침’ 이후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하였으나 우리군은 북한으로부터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미증유의 우리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포탄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천안함 폭침이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소행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진보성향의 신문에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었

으나 ‘연평도 포격도발’은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

『경향신문』,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성향의 신문 1기 논조는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위기관리능력이 부실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사상자의 규모를 키웠다면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논조를 유지하였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임을 발표하자 진보성향의 신문 2기 논조는 이를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쉽게 동의하는 논조도 아니었다. 진보성향의 신문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유지하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대결정책을 추구한 결과이다”라면서 우리 측의 원인제공 론을 부각시켰다. 또한, 진보성향의 신문은 우리 측의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 대북 강경책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고 중국에는 남북한이 공멸하는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3기 논조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강한 톤으로 비난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자체측구 및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논조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보수, 진보성향 신문의 보도경향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건발생 초기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침몰의 원인을 북한소행으로 규정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정부와 군의 대응과 안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신문보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비난하는 보도경향을 보였으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군과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른 의문점을 제기하며 각종 증거를 북풍 시나리오에 켜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 남북한 주요 신문 사설논조 비교분석

남한의 ‘천안함 폭침’을 바라보는 보수, 진보성향 신문의 대립되는 논조와는 달리, 북한은 유일사상 지도체제 답게 『로동신문』 논조가 천안함 폭침의 북한소행 가능성을 부정하

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과 관계없는 사건으로 남한의 날조극 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3월 26일 사건발생 이후 우리 측 반응에 맞춰 반박기사를 내보냈다. 보도형태는 비중에 따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외무성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선평화옹호전 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 인민군 전선서부사령부 통고,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북한은 이런 형태의 기사를 1년 동안 총 200여건을 게재하였다.

특히 천안함 폭침의 북한소행 부정논조가 합리적 근거 및 논리적인 배경설명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한의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다시 재탕하거나 ‘천안함 폭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한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국제정세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몰아가는 등 그동안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보여준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국내 언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치열한 논리적 설득이 존재하여 근거가 빈약하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은 도태된다. 보수, 진보성향 신문의 대북 논조도 국민을 상대로 논리적인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반영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대변지로 기사의 논조가 일관되게 김정일의 교조적인 지시에 충실하며 합리성과 보편성을 상실한 언론으로 체제 유지에만 몰두하였다.

3. 정책적 함의

진보성향의 신문과 보수성향의 신문의 시각 차이는 남남갈등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시에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는 점, 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건강한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로동신문』 사설은 조선노동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없음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양한 논조가 존재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고양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모두가 한결 같다면 사회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반면에 북한은 주체사상만이 통용되는 유일사상 지도체제이다. 모든 것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그것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면, 지난번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에서 볼 수 있듯이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생명유지 자체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양한 논조를 존중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안보 관련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대 공약수가 존재해야 한다.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가운데 보수, 진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보수, 진보성향 신문의 논조가 천안함 폭침관련 사설에서 보여준 치열한 논쟁은 장려 할만하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북한과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북한에게 유리한 주장은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가 허술하고 모순되어 있지만 강압적이고도 획일적인 주체사상으로 유일영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 한 채 보수, 진보진영 간에 끝없는 분열로 치닫는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 진보진영이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며 총화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IV. 결 언

천안함 폭침은 최근 10년간 남북관계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런 만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며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론분열의 양상은 보수, 진보성향을 대표하는 국내 주요 일간지의 사설논조에서 극명하게 확인 되었다.

천안함 폭침의 전반적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천안함 사건의 현실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한지 4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도발의 주체와 대응태세에 대한 일치된 국론결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일간지 사설과 북한 『로동신문』의 논설을 비교분석하여, 사설논조에 따라 형성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는 동일한 천안함 폭침사건

에 대해 분명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우선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천안함 폭침사건 발발이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북한소행이라는 주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한 정부 및 군 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 하였다는 점도 유사하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건 발발이후 유보적 논지로 일관하다 민·군 합동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성토 하였고, 그 대응책도 정부 및 군의 안보능력 강화를 주문한 반면 남북대화의 방식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둘째, 북한의 『로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이후 간헐적으로 논설 등을 통해 자신들의 도발을 부정하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외에서 천안함 의혹으로 제기되던 견해들을 종합하여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이후에 또 다시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이라는 형태의 문건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도발을 부정하였다.

셋째, 천안함 폭침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쟁의 열기가 ‘연평도 포격도발’이후에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4개 언론사와 북한 『로동신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태로써 천안함 폭침이후 불거진 남남갈등의 양상을 보면서 사태를 오판한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도발을 감행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론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북한의 도발의지와 행태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북한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회부 등 단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주요 신문 사설논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해올로지적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신문사별 사설논조와 이념에 따라 보도경향과 담론 구조에서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이후 국내에서 11권⁶²⁾의 관련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를 끌고 온 사건이었다. 한 사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

62) 강태호 『천안함을 묻는다』 (파주: 창비, 2010); 김보근 외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서울: 한겨레출판, 2010);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김창수 외 『천안함 외교의 침몰』 (서울: 풀빛, 2011); 신상철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서울: 책으로보는세상, 2012); 윤종성 『천안함 사건의 진실』 (서울: 올리브 M&B, 2011); 이승현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파주: 창비, 2010); 이정훈 『천안함 정치학』 (서울: 글마당, 2012); 이주천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김정일의 최후』 (서울: 뉴라이트출판사, 2012); 평화재단 엮음 『천안함에서 NLL까지』 (서울: 정토출판, 2013).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및 군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대한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계기관의 명쾌하지 못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 자체를 외면하고 ‘부적절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서 ‘천안함 폭침사건’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이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에 유포하는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천안함 폭침원인 등에 대한 본질을 추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요일간지 사설과 북한 『로동신문』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요인을 검토하여,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특히 국내 주요 일간지의 사설논조를 비교분석 하면서 북한의 소행에 대하여 소위 남남갈등이라 할 수 있는 국론분열의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북한 『로동신문』 사설을 고찰하면서 실질적인 조선노동당을 대변하는 신문사설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유사 상황 재발 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해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실천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견해는 수용하되, 국가안보 관련 사건보도 시 언론매체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핵심용어나 주요 수식어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위주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및 위기관리 능력강화 등 정부차원의 초기 대응도 명쾌하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조치하여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종북 세력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호도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비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태호. 『천안함을 묻는다』 파주: 창비, 2010.
- 고승우. “‘상식과 논리’가 사라진 천안함 사건 보도 정부, 수구언론의 ‘떠넘기기’와 ‘소설 쓰기.’” 『민족21』 제111호(2010).
- 김보근 외.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서울: 한겨레 출판, 2010.
-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서울: 상지피앤아이, 2011.
- 김종하 외. 『천안함 이후의 한국국방』. 성남: 북코리아, 2010.
- 김재범 외.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세미나 : 천안함 사태 언론 보도 진단과 개선방안.” 『한국논단』 (2010).
- 김창수 외. 『천안함 외교의 침몰』. 서울: 풀빛, 2011.
- 김하영,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마르크스21』 제6호 (2010).
- 도형래.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 분석.” 한국방송학회 2010 봄철 정기학술대회(2010. 5).
- 백선기 외.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언론학연구』 제15권, 제1호(2011).
- 박현수. “언론보도에 나타난 군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천안함 폭침’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5권(2011)
- 박태수. “천안함은 좌초로 침몰되었다.” 『정세와 노동』 제56호(2010).
- 신상철.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서울: 책으로보는세상, 2012.
- 이금아. “남북 관련 사안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천안함 보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0).
- 이동복.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 『신아세아』 제17권, 제2호(2010).
- 이상철. “‘자크 데리다’ 특별기고 -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해체론적 독법(Ⅱ).” 『제3시대』 (2010. 7).
- 이승현.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파주: 창비, 2010.
- 이완기. “천안함 사건 보도의 프레임 전략과 뉴스 객관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2).
- 이정훈. 『천안함 정치학』 서울: 글마당, 2012.

- 이주천.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김정일의 최후』 서울: 뉴라이트 출판사, 2012.
- 임양준.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2집, 1호(2013).
- 염규현.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논란] 천안함 진실게임 이제부터 시작 6자회담 재개 촉진제 될 가능성.” 『민족21』 제111호(2010).
- 윤종성. 『천안함 사건의 진실』 서울: 올리브M&B, 2011.
- 유세경 외.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16호(2010. 12).
- 조남태. “잘못된 천안함 폭파 대처: 방자(防者)는 이기지 못한다.” 『한국논단』(2010)
- 정규섭.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도발동기 분석.”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2010).
- 제성호.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천안함 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서울국제법연구』 17권, 1호(2010).
- 최은아. “천안함과 한반도 평화.” 『정세와 노동』 제60호(2010).
- 현인택. “북한, 천안함 폭침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통일한국』 제330호(2011).
- 북한연구소.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와 한반도 정세.” 『北韓』 제463호(2010).
- 북한연구소.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전문.” 『北韓』 제464호(2010).
- 평화재단 엮음. 『천안함에서 NLL까지』 서울: 정토출판, 2013.
- 평화문제연구소. “천안함사태 조사결과.” 『통일한국』 제318호(2010).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로동신문』

Comparative Analysis of NK and ROK Major Press Editorial Comments regarding the Sinking of ROKS Cheon-An

-Focusing on ROK's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aily news as well as nK's "Ro-dong newspaper"-

Kim, Kwanho

Keywords

Editorial Comments, Unified Public Opini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e Shelling of Yeon-Pyeong Do

The Sinking of ROKS Cheon-An that occurred in vicinity of Pack-Young DO on March 26th, 2010 induced an ideological conflict within ROK and displayed a drastic divide in public opinion. This divide in public opinions became distinctly evident in editorial comments of mainstream publications such as "Kyunghyang News," "Dong-A Daily," "Chosun Daily," "Hangyurae" that each represent a marked left or right tendency.

Because ROK citizens could not gain a full account of the details of the Sinking of Cheon-An, editorials played a critical role in conceiving the actualities of the incident, and sometimes even created particular discourse and ideological meanings for certain issues. When it comes to issues on South-North relationship or national security, editorials carry significant weight, as ordinary citizens have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While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inking of ROKS Cheon-An, no unified public opinion has been formed regarding the principal agent of the provocation and the readiness posture. Thus, a clear understanding of realities is imperative.

In turn,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s in ROK's mainstream daily newspapers and nK's "Ro-dong newspaper." Upon scrutinization of discourse and ideological meanings formed by editorial comments, takeaway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first year after the Sinking, Kyunghyang News and Hangyurae which both have progressive tendencies, hardly asserted that the Sinking was committed by nK. Instead, both publications focused on criticizing ROK's military response and security issues. The two also insisted the incident was to resume talks between ROK and nK. In contrast, Dong-A and Chosun Daily which have rather conservative tendencies censured

nK's provocations and demanded more proactive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and military in rectifying the situation.

Secondly, nK's Ro-dong newspaper denied the Sinking of ROKs Cheon-An being their provocation; after 7 months since the incident, the publication collected all speculations put forward in various other publications worldwide regarding the Sinking and refuted their provocation by issuing a piece called "Open Actualities of National Committee Inspection Team."

Thirdly, the heated debate around the Sinking of Cheon-An waned after the Shelling of Yeon-Pyeong DO. This feature was common in both mainstream media in ROK as well as Ro-dong newspaper in nK. After the Shelling of Y-P-DO with assurance that provocations were committed by nK, the tone of argument has turned its tide towards acknowledgment of convictions including "Imposi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such,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 comments regarding the Sinking of Cheon-An reveals that various ideological impasse existed and that structure of discourse as well as reporting tendencies differ drastically depending on the media agency.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how the Sinking of Cheon-An was portrayed by different mainstream media agencies of ROK and Ro-dong newspaper of nK, reviews the possible causes of differences, and reflects the implications of the two.

[논문투고일 : 2014. 01. 10]

[심사의뢰일 : 2014. 02. 11]

[게재확정일 : 2014. 03. 04]